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법과 정치**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⑤ 07. ⑤ 08. ④ 09. ③ 10. ④
11. ⑤ 12. ④ 13. ④ 14. ① 15. ③ 16. ② 17. ① 18. ① 19. ④ 20. ②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좁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며, 좁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본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모두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정치를 좁은 의미로 파악하면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면 기업에 대한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도 정치로 본다.
-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면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을 중시한다.
-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면 다양한 집단을 정치의 주체로 본다.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저 임금제 실시하는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 ②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 ③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방안이다.
- ④ 상호주의에 근거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3.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은 시민 단체, ㉡은 이익 집단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주체이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참여 주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정부에 대하여 비판을 하며 정강에 기본 이념이 규정되어 있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 ③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 단체이다.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만 법률안을 발의하지는 못한다.

4.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국회, B는 헌법 재판소이다. 갑은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A의 헌법상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갑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법원에 한다.
-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 의장과 달리 헌법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 소추될 수 있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며,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립 내각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ㄴ.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의회가 행정부를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을국은 대통령제인데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 ㄷ.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6.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② 위헌 법률 심사를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 ③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7. 근대 민주 정치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A는 차티스트 운동, B는 여성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며, 모두 근대 민주 정치 과정에서 나타났다.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④ 차티스트 운동, 여성의 선거권 확대 운동은 모두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8. 기본권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A는 자유권, B는 평등권, C는 청구권이다.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고,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②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다.

9. 정당 제도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의회 의원 선거 결과 t대에는 다당제, t+1대에는 양당제가 나타난다. ㄴ.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다당제보다 양당제이다. ㄷ.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다당제보다 양당제에서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ㄴ.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10.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ㄴ.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자는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에 해당하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달리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ㄷ.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근로하였으므로 임금은 54,000원이다.

11.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가)에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는 계약은 권리만을 얻는 계약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모두 존재하는 계약이므로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인 계약이다.

② 계약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③ 신분증을 위조하면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용돈의 범위 내에서 게임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12.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전입신고를 마친 11월 13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며, 소액 임차인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2017년 12월 11일 A주택이 경매된 경우 갑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게 되고, 남은 금액을 병이 변제받게 된다. 따라서 병이 받는 변제액은 갑이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과 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17년 9월 16일부터 유효하다.

② 갑이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임차권이 등기부에 공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자신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이므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주거를 보장받는다.

⑤ 갑은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13. 상속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유언이 무효이면 상속 1순위는 C와 F인데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자인 직계 존속 D가 7천만 원을 모두 상속 받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② 유언이 무효라면 C는 3천 5백만 원을 상속받는다.

③ E와 B는 모두 A의 친족이 아니다.

⑤ 유언이 유효하면 C와 F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정 상속분 전액을 상속 받는 것은 아니다.

14.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이해

정답 해설 : 정에 대한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갑과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은 병의 불법 행위 책임 여부와 상관없다.

③ 피용자인 B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④ B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A는 정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정이 C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소년법의 적용 이해

정답 해설 : 검사는 갑과 을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갑과 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갑, 을과 달리 병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② 갑, 을, 병의 행위는 모두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다만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④ 가정 법원 소년부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형의 선고 유예는 형사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것과 미성년자 부모의 민사상 책임 면제 여부는 상관이 없다.

16.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벌금형은 유죄 판결이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되었다.

③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루어졌으므로 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였을 것이다.

④ 배상 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간단한 신청 절차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⑤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피고인 신분 모두에서 인정된다.

17.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중 A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ㄱ.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모두 적용된다. ㄴ.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적용할 형법 규정이 없는 경우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ㄴ. 범죄와 처벌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ㄷ. 범죄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총회에서는 1국 1표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지므로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진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9. 조약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국제법의 법원 중 A는 조약이다. 조약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만 효력을 갖는다.

②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헌법보다 하위법의 지위를 갖는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⑤ 일반적인 국제 관행과 법적 확신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제법은 국제 관습법이다.

20.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 갑국의 현행 선거 결과와 선거 제도 개편안에 따른 예상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A당	B당	C당	D당	E당
1석	3석	0석	0석	2석

<1안>

구분	정당 의석수
1-4선거구	B당 2석 또는 A당 1석, B당 1석
2-5선거구	A당 1석, E당 1석
3-6선거구	B당 1석, E당 1석

구분	당선 정당
1-4선거구	B당 2석 또는 A당 1석, B당 1석
2-3선거구	A당 1석, B당 1석
5-6선거구	E당 2석 또는 A당 1석, E당 1석

<2안>

A당	B당	E당
$6\text{석} \times 80/250 = 1.92$	$6\text{석} \times 110/250 = 2.64$	$6\text{석} \times 60/250 = 1.44$
2석	3석	1석

② <1안>에서 A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최소 1석, 최대 3석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행에서 A당의 득표율은 약 26.7%인데 의석 점유율은 약 16.7%이고, C당의 득표율은 10%인데 의석 점유율은 0%이므로 두 정당 모두 과소 대표되었다. 2안에서 B당은 득표율이 약 36.7%인데 의석 점유율은 50%이므로 과대 대표되었고, E당은 득표율이 20%인데 의석 점유율은 약 16.6%이므로 과소 대표되었다.

③ 선거구가 1-4, 2-5, 3-6으로 통합되면 B당의 의석수는 최대 3석, 최소 2석이므로 현행보다 1석 줄어들 수 있다.

④ C당의 경우 1안, 2안 모두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없다.

⑤ D당의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없으므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으나, E당의 경우에는 1안은 최소 1석, 최대 2석이므로 1석을 얻을 수 있는 2안보다 1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